

## 2020년 11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해당사항 없음'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 프로그램 명 : 바로보는TV 음부즈맨

○ 편성시간

기 존	본방송 매주 일 04:00~04:30(재방송 매주 월00:25~00:55)
변 경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김홍태	11/01	<뉴스워치>,<뉴스리뷰>,<토요와이드>	
김창숙	11/08	<뉴스메이커>,<뉴스리뷰>,<뉴스워치>	
이재원	11/15	<뉴스리뷰>,<뉴스포커스>,<뉴스투나잇>	
김창숙	11/22	<뉴스메이커>,<뉴스센터 12>,<뉴스워치>	
이정훈	11/29	<뉴스리뷰>,<토요와이드>,<뉴스워치>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이정훈	대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15. 11. 26	-
활동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교수	2016. 08. 23	-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0 11/1(일)	김홍태	10월 22일 오후 8시 뉴스20에서는, 지난 12일 물류센터 밤샘 근무 후 집에서 숨진 쿠팡 택배 노동자 장덕진 씨의 유족이, 과도한 노동강도를 비판하며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음을 전했는데요, 장 씨의 아버지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아들이 제일 오래됐고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일을 더 시켜 1인 4역을 하고 있었다”며 과도한 야간 근무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을 전했습니다. 강규혁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도 “총알 배송의 민낯에 수많은 택배 노동자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유족은 쿠팡 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쿠팡 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 보도는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19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배달의 필요성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CJ대한통운은 대표이사의 사과가 있었고,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줄이고 전원 산재보험 가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쿠팡의 경우 위 보도 당시까지	택배 노동자의 하루를 동행취재하는 등 택배업계 문제에 대해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 업종에만 집중할 여력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의 면담을 거부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도를 함에 있어, 우선 현 상황에서 택배의 중요성, 택배기사의 노동강도 그리고 택배업이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추가보도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유통비용 증가로 물건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택배업은 사람의 노동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분야이기에, 택배업의 현재 상황과 노동에 상응하는 임금의 책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 과도한 택배 노동의 현 상황은 최대한 빠르게 개선되어야 또 다른 과로사를 막을 수 있다는 강한 멘트가 필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0 11/8(일)	김창숙	10월 30일 <뉴스메이커>에서는 추 장관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개월 만에 8%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 장관의 직무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고, 윤 총장의 직무 긍정평가는 39%, 부정평가는 44%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7월 초와 비교하면 추 장관의 직무 긍정률은 8%포인트, 윤 총장은 4%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이 극명하게 갈리긴 했지만,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는 윤 총장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이번 국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단어를 사용해 시청자들의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단순히 정치공방을 중계하는 차원을 넘어 사안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도록 취재여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감의 하이라이트'라고 언론이 명명할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에 대해 작성한 듯 비판하는 이번 경우와 같은 갈등상황을 보도하다 보면, 언론들이 자칫 자극적인 단어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합뉴스TV도 이번 보도에서는 때리기, 겨냥하기, 퍼붓기 등 다소 갈등을 부각시키는 단어들에 눈에 띄었습니다. 참여한 대립 상황일수록 언론은 보다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해주는 것이 시청자들이 사건을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중계에 머무르지 말고 갈등의 원인과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p>	
2020 11/15(일)	이재원	<p>9일 [뉴스포커스]에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정권교체와 관련된 의미를 짚어보는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가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박빙으로 치열했던 미국 대선에 대해 두 전문가는 모두 선거를 드라마에 비유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지만 트럼프가 불복을 선언해 앞으로도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연설에서 "민주당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는 등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를</p>	<p>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섭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p> <p>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출연자의 발언을 실시간 제어할 수 없으나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관점을 내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고지를 하겠습니다</p>

		<p>내놓은 데 대해 바이든이 역전승을 한 기분이지만 트럼프 표가 늘어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바이든 당선자의 비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반대되는 성향"이라면서도 "트럼프가 심판을 받았다고 보다는 그만큼 미국이 반으로 갈려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이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덕분에 이익을 봤고, 트럼프와 반대로 여성, 인권 문제 등을 내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여성 오바마'라 불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멀라 해리스는 하버드 대 출신으로 유색인종으로 첫 번째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를 지내고, 2011년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2016년 흑인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상원의원에 올랐다는 사실이 자막으로 잘 제시되었습니다. 이날 대담은 두 전문가가 번갈아 이야기 하는데 그쳐 다양한 입장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잘못하면 식물정부가 될 수 있다며 근거로 "바이든은 앞으로 1억 5000만명의 트럼프 지지자를 어떻게 끌고 갈지(2분54초부분)"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1억 5000만명은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라,</p>	
--	--	--	--

		<p>보도 당시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수였습니다. 또 같은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 “우리나라로 치면 박영수 추미애, 저격수 이미지”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섹시하다고 볼 수 있는 카리스마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흑인여성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또 다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수사를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해 보여 아쉬웠습니다.</p>	
2020 11/22(일)	김창숙	<p>11월 15일 &lt;뉴스17&gt; 역시 전세 품귀 현상과 전셋값 상승을 언급하며,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가격이 두 달 만에 1억 5,000만원이나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김포시 아파트값은 2주 만에 4% 가까이 급등할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서울의 전세난이 낳은 또 다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포는 비규제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쉽게 집을 살 수 있는데, 서울에서 전세를 얻을 돈이면 이곳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서울 전세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서울 전셋값은 72주째 오르고 있고, 지난주 전국 전셋값은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뒤, 재계약 수요가 늘면서 전셋집 찾기가 어려워진 탓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던 정부도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서 비어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정</p>	<p>말씀하신대로 부동산 기사가 작은 사항이라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만큼 더욱 심사숙고해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부가 사들여 다시 전세로 내놓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반응은 회의적이라며, 이미 심각 단계로 접어든 전세난이 이번 대책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거 불안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이번 정권의 성패가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주거 안정이 핵심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상대를 비판하기 바쁘네요. 부동산은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하나의 원인에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고, 단기간에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정치권에서는 비판을 위해 원인을 단순화시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들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김포 아파트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한 사례들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례 선별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p>	
2020 11/29(일)	이정훈	<p>지난 주 연합뉴스TV는 다가올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방역 대책을 소개하면서 학원가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 급증 소식뿐만 아니라 지난 주 중등교원 임용 고시에 적용된 정부의 방역 방침도 소개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볼 수험생이나 그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입</p>	<p>수능 등 주요 행사에 대한 방역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다양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시 대비 정부의 방역 지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의 수능 방역 대책보도는 시기적절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등 임용 고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 19 확진된 수험생들이 취해야 하는 혹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점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을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나 시험 당일 특정 지역에 다수 확진자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보도들이 포함되었다면 보다 유용한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0. 11. 01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6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택배기사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감백신을 맞고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30명을 훌쩍 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자체에서는 백신접종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심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동네의 버려진 공터를 72시간 안에 도심 녹지로 탈바꿈시키는 이색적인 프로젝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택배기사 과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오후 6시 뉴스워치에서는,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가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음을 전하며,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해, 작업 시간을 줄이고 업무 강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올해 들어 과로사를 포함해, 사망한 택배업계 종사자는 모두 12명으로, 이 중 5명이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이라고 전했는데요, 공공롭게도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 당일에도, CJ대한통운 소속 또 다른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소식이 있었음을 전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허브터미널에서 근무하던 간선차 운전기사 39살 강모 씨가, 배차를 마치고 쉬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한 건데요, 잇따른 택배 노동자의 사망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노동을 종용하는 업계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는 뒤늦게 사과에 나섰습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는 연이은 택배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회사를 맡고있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택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음을 전했습니다. 우선 택배 현장에 분류지원인력 4,000명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해,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을 전했습니다. 10월 22일 오후 8시 뉴스20에서는, 지난 12일 물류센터 밤샘 근무 후 집에서 숨진 쿠팡 택배 노동자 장덕진 씨의 유족이, 과도한 노동강도를 비판하며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음

을 전했는데요, 장 씨의 아버지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아들이 제일 오래됐고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일을 더 시켜 1인 4역을 하고 있었다"며 과도한 야간 근무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을 전했습니다. 강규혁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도 "총알 배송의 민낯에 수많은 택배 노동자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유족은 쿠팡 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쿠팡 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 보도는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19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배달의 필요성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CJ대한통운은 대표이사의 사과가 있었고,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줄이고 전원 산재보험 가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쿠팡의 경우 위 보도 당시까지 유족의 면담을 거부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도를 함에 있어, 우선 현 상황에서 택배의 중요성, 택배기사의 노동강도 그리고 택배업이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추가보도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유통비용 증가로 물건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택배업은 사람의 노동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분야이기에, 택배업의 현재 상황과 노동에 상응하는 임금의 책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 과도한 택배 노동의 현 상황은 최대한 빠르게 개선되어야 또 다른 과로사를 막을 수 있다는 강한 멘트가 필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독감백신을 접종한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지자체의 고심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0월 23일 오후 8시 뉴스리뷰에서는 독감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면서,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30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사망자가 늘어나자 지자체에서는 접종을 계속해야 하나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질병관리청이 23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발표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사망한 사람은 모두 36명이며, 전날보다 사망자는 9명 늘었고,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중증환자로 신고가 접수됐으나, 끝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70대 남성이 지난 19일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으며, 서울에서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충남에서도 23일 당진과 천안에서 독감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각각 1명씩 확인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남도 총 6명이 사망했으며, 전남에서 4명, 전북 3명, 광주에서도 1명이 사망했음을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3일 현재,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독감예방접종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독감예방접종과의 정확한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

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보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서울 영등포구보건소와 경북 포항시 등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 공문을 통해 독감예방접종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지자체가 보건당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독감백신 접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질병관리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소송 6년 만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지난 2014년 당시 60대였던 A씨는 경기 용인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11일이 지나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결과,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길랭-바레 증후군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으로,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예방접종 후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는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 결과는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고법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인 밀접성이 있다"며 "예방접종으로부터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독감백신으로 인해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각 지역의 사망자수를 밝히며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예방접종을 계속할지가 큰 문제인데요, 이는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망자의 수가 과거의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자의 수나 외국에서의 사망자의 수에 비추어 통계적으로 의미가 어떠한지를 추후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법원 판례를 보도하였고, 접종과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달한 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위 소송에서 질병관리청의 처분에 불복한 1심에서는, 소 제기 기간이 지나 각하되었지만, 2심에서는 최초의 질병관리청의 기각 처분이 아닌,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내용을 바꿔 청구했기에, 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서 위 고등법원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을, 좀 쉽게라도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10월 24일 오전 토요일이드에서는, 동네의 버려진 공터를

72시간 안에 도심 녹지로 탈바꿈시키는 이색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오전 8시 토요일에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동네의 버려진 공터를 72시간안에 도심 녹지로 탈바꿈시키는 이색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했는데요, 서울시의 '72시간 프로젝트'로, 호응속에 올해 벌써 9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산책로 옆 구석진 작은 공간 붉은 벽돌담 아래 아귀자기한 식물들이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을 반기지만, 이곳은 원래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공터였다고 전하며, 지금은 이렇게 아담한 정원으로 바뀌었는데요, 불과 72시간만의 변화라고 전했습니다. 버려진 자투리땅을 72시간 안에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이른바 서울시 '72시간 프로젝트' 결과물인데요, 독일의 같은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해 시작한지 올해로 9년째로, 시민과 도시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자투리공간은 도심 속 쉼터가 되고,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길동 서울시 조경과장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기에는 실질적 공간들은 거의 없으며, 작은 자투리공간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새로 찾아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자는 지난 9년간 서울 도심 안에 조성된 면적은 78곳, 1만 1천여 제곱미터에 이른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72시간안에 도심 녹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도는 자연을 되살리며 우리의 환경을 쉼터로 바꾸는 매우 좋은 보도의 모습입니다. 현재 환경오염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9년간 계속되어 78곳이나 녹지 조성으로 변화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큰데요, 이러한 멘트가 좀 더 강조됐음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되면 좋겠다는 멘트도 있었음 좋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비록 사실을 주로 전하는 뉴스 방송에서도 좋은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0. 11. 08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6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계 진출을 암시한 듯한 윤 총장의 발언 역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추 장관을 옹호하였고, 야당은 추 장관에서 사퇴의사까지 물으며 공세를 펼치는 등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26일 오후 6시 <뉴스메이커>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추 장관은 두 건의 검찰을 시사했는데, 첫 번째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한국전파진흥원이 옴티머스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관할하는 차장검사가 윤 총장의 측근이었고, 옴티머스 측 변호사는 윤 총장과 국정농단 특검에서 한술밥을 먹은 인사라며, 윤 총장 주변 사람 사이의 검은 거래로 옴티머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추 장관도 이에 호응하는 발언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수사선상에 오른 언론사 사주와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며 검찰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의 '자신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이 "납득이 안된다", "부적절하다"고 반응했고, 자신이 법률상 삼급자가 맞다고 반박하며 지휘·감독권자로서 윤 총장의 선을 넘는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이 퇴임 후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해 정계 진출 해석을 낳은 데 대해서는 "내일 정치를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선 정치 생각이 없다고 답해야 했다"고 비판했고, 대통령의 비선을 통해 임기를 보장했다는 윤 총장 주장엔 대통령이 그럴 성품이 아니라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사기범 김봉현 씨의 말만 믿고 윤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추 장관은 김씨의 말만 갖고 발동한 수사지휘권이 아니며, 현재 김씨의 일부 주장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27일 <뉴스리뷰>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관련해 검찰을 지시한 사안은 4건으로 검사 비위 은폐 의혹, 라임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 차별 수사 의혹,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의혹, 옴티머스 사건 초기 부실수사 의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22일 "임기라고 하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윤 총장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검찰 결과가 윤 총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온다면 추 장관이 오히려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를 공격받고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10월 30일 <뉴스메이커>에서는 추 장관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3개월 만에 8%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 장관의 직무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고, 윤 총장의 직무 긍정평가는 39%, 부정평가는 44%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7월 초와 비교하면 추 장관의 직무 긍정률은 8%포인트, 윤 총장은 4%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이 극명하게 갈리긴 했지만,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는 윤 총장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라고 언론이 명명할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하는 이번 경우와 같은 갈등상황을 보도하다 보면, 언론들이 자칫 자극적인 단어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합뉴스TV도 이번 보도에서는 때리기, 겨냥하기, 퍼붓기 등 다소 갈등을 부각시키는 단어들에 눈에 띄었습니다. 참여한 대립 상황일수

록 언론은 보다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해주는 것이 시청자들이 사건을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중계에 머무르지 말고 갈등의 원인이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29일 오후 5시 <뉴스워치>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9일까지 독감 백신을 접종한 이후 사망했다는 신고 사례가 72명에 달하는데 보건당국이 이 중 71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독감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독감백신 접종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도 아니었고 동일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들은 종종 이상의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중 부검이 이루어진 40명은 대동맥 박리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정확한 사인이 밝혀졌고,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나머지 사망자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병이 확인돼 이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70대 이상이 86%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접종률이 낮은 임신부의 경우 독감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고,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태아에게도 전달돼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도 독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28일 오후 8시 <뉴스리뷰>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혹은 28일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는 게 우리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사망 신고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의학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30일부터 접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30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혁민 교수를 초청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모든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독감 백신도 100% 안전한 행위는 아니라면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독감백신을 접종한 10만명 중에 젊은 사람은 6, 7명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10명 정도 사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고령층의 경우 만 명당 한 명이 사망하는 것인데, 독감의 경우 고령층 사망률이 1%로, 100명당 한 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접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된 사례가 연일 전해지면서 시청자들이 독감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연합뉴스TV가 독감백신 접종이 사망과 인과성이 낮다는 보건당국의 발표 결과를 전달하면서, 해당 결과가 신뢰할 만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같이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발표결과를 믿고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한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독감의 위험성을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고하니 독감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더 와닿았는데,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

지는 사안이 있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6일 <뉴스워치>에서는 전동 킥보도에 대한 규제가 곧 완화될 예정이지만, 오히려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일방통행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는 차랑에 하나의 킥보드에 함께 탄 여고생 2명이 역주행하다가 갑자기 튀어난 사고 영상, 신호를 어기고 길을 건너던 킥보드로 인해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한 현장 영상을 보여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면서, 2016년 약 50건이었던 관련 사고가 지난해 890건으로, 18배 이상 늘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충돌사고는 아니지만 달리는 차 사이를 킥보드가 가로지르는 영상, 뒤차를 놀리기라도 하듯 길을 막은 채 좌우를 누비는 영상 등을 보여주며 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운행행태를 꼬집었습니다. 또한, 12월부터는 운전 가능 연령이 지금보다 3살 낮아진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교통 법규 관련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헬멧 등 보호장비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 사고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처벌규정이 미비하고 행정당국의 엇갈린 법령 해석으로 인해 관리마저 부실한 상황인데요. 제도적 정비 및 안정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연합뉴스TV가 관련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규제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20. 11. 1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6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미국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소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9일 [뉴스리뷰]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점검하기 위해 대검찰청 청사를 찾은 현장에서 관련 뉴스를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법무부 특활비도 함께 검증하면서 추 장관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과 집행 내용을 직접 검증하고자 했고, 추 장관 특활비도 함께 검증 대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문제점이 이날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는 검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서로 실감을 벌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은 없었고 추 장관은 특활비를 올해 전혀 안 썼습니다."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들은 일선 격려금으로 특활비 썼던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런 행태를 활용하지 않았던 건지 뭔지 모르지만, 검찰국이라든지 여러 경로 통해 실국에서 부당하게 특활비를 사용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자료가 부실"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예년 보다 감소해 특활비가 줄었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고, 야당은 법무부가 각 실국에서 특활비를 기본경비로 썼으며, 검찰국의 경우 올 한해 7억 원 넘게 쓴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의 말미에는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의 특활비 횡령이 의심된다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리뷰]는 검찰 내부 결속에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연수원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보도에서 윤 총장은 11월 첫주 부장검사 강연에 이어 신임 차장 검사들을 만난 후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이 신임 차장검사들 14명을 대상으로 70여 분간 진행한 리더십 강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윤 총장은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차장검사의 역할에 대해선 "검찰 보직 중 가장 힘든 자리"라며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소추 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리뷰]는 행사의 내용 뿐 아니라 분석과 배경 설명을 곁들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방문 당시처럼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만을 부각하는 언론보도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갈등에 대한 보도 보다 사법 개혁이라는 대의에 맞게 법무부와 검찰, 정치권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취지가 국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 관련된 소식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했습니다. 9일 [뉴스리뷰]는 바이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문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와 무관하게 내년 1월 취임을 목표로 정권 인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워싱턴 특

파원발로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12만 명을 넘기는 등 코로나 대응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임과 동시에 마스크 의무화 등 대대적인 정책 전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선 당선인의 목소리로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과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발족할 것이며,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삽입했습니다. CNN방송을 인용해 바이든이 인수위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불복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위 쿠슈너에 이어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패배를 인정할 것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뉴스큐브에서는 이번 미국 대선이 남긴 다양한 '최초' 기록들도 살펴봤습니다. 먼저 뜨거운 대선 열기가 역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짚어줬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사상 처음 7,000만 표 이상을 받아 미 대선 역사상 최다 득표자로 등극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에게 무릎을 꿇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7,000만 표 이상을 얻었다고 전하며, 최소 1억5,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해 66%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1900년 이후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최초' 기록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 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124년 만에 선거 결과에 불복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1942년 11월 20일생으로 미국 나이 77세인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취임과 동시에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영작문 교수인 아내 질 바이든 여사는 역대 최초로 '투잡' 영부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9일 [뉴스포커스]에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정권교체와 관련된 의미를 짚어보는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가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박빙으로 치열했던 미국 대선에 대해 두 전문가는 모두 선거를 드라마에 비유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지만 트럼프가 불복을 선언해 앞으로도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연설에서 "민주당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는 등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바이든이 역전승을 한 기분이지만 트럼프 표가 늘어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의 비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반대되는 성향"이라면서도 "트럼프가 심판을 받았기 보다는 그만큼 미국이 반으로 갈려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이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덕분에 이익을 봤고, 트럼프와 반대로 여성, 인권 문제 등을 내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여성 오바마’라 불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멀라 해리스는 하버드 대 출신으로 유색인종으로 첫 번째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를 지내고, 2011년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2016년 흑인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상원의원에 올랐다는 사실이 주목으로 잘 제시되었습니다. 이날 대담은 두 전문가가 번갈아 이야기하는데 그쳐 다양한 입장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잘못하면 식물정부가 될 수 있다며 근거로 “바이든은 앞으로 1억 5000만명의 트럼프 지지자를 어떻게 끌고 갈지(2분54초부분)”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1억5000만명은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라, 보도 당시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수였습니다. 또 같은 교수는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 “우리나라로 치면 박영수 추미애, 저격수 이미지”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섹시하다고 볼 수 있는 카리스마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흑인여성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또 다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수사를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해 보여 아쉬웠습니다. 9일 [뉴스투나잇]은 최근 전세난에 대해 정부의 엇갈린 입장을 짚었습니다. 9일 [뉴스투나잇]은 전세난에 대해 정부의 엇갈린 입장을 짚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등 주택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미묘한 의견차를 드러냈다는 것인데요. 전세난의 원인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 역시 “지금 조금 어려우신 점에 대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내 후년부터는 주택공급이 상당수 늘어나 지금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난은 수도권은 물론 울산, 세종 등 지방 도시까지 확산하며 전국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단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세 문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의 발표나 국회의 국정감사 등 공식적인 입장 외에도 부동산 전문가, 은행 전문가 등 해당 사안을 경험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깊이 보도하여 정부의 대책에 영향을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0. 11. 2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6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전국 곳곳에서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새 임대차법이 전셋값을 올리는 원인인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갑을 논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상을 두고 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정부가 전세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그 실효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뉴스메이커>에서는 새 임대차법 시행 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분석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매매가격 상승률 0.21%의 7배에 육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으로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울의 서북·서남·동북권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12일 <뉴스메이커>에서는 최근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쭉고 있다며, 서울의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부산 등 지방 비규제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서울을 오가기 쉬운 지하철 김포골드선 주변의 한 아파트를 소개하며, 두 달 전 전용면적 84㎡가 5억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호가가 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맞닿은 유일한 비규제지역인 김포시의 아파트값은 통계상으로도 2주 만에 4% 가깝게 폭등했는데, 이처럼 실수요자가 서울 외곽으로 몰리며 올해 서울 사람이 사들인 경기도 아파트는 15년 만에 가장 많은 3만 3,000가구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레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비슷한 현상은 지방에서도, 특히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중 최근 겹투자자까지 늘어난 부산은 이번주 아파트값이 0.56% 올라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을 기록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도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보도했습니다. 11월 15일 <뉴스17> 역시 전세 품귀 현상과 전셋값 상승을 언급하며,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가격이 두 달 만에 1억 5,000만원이나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김포시 아파트값은 2주 만에 4% 가까이 급등할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으며, 서울의 전세난이 낳은 또 다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포는 비규제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쉽게 집을 살 수 있는데, 서울에서 전세를 얻을 돈이면 이곳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서울 전세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서울 전셋값은 72주째 오르고 있고, 지난주 전

국 전셋값은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뒤, 재계약 수요가 늘면서 전셋집 찾기가 어려워진 탓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던 정부도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서 비어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다시 전세로 내놓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반응은 회의적이라며, 이미 심각 단계로 접어든 전세난이 이번 대책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거 불안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이번 정권의 성패가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주거 안정이 핵심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상대를 비판하기 바쁘네요. 부동산은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하나의 원인에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고, 단기간에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정치권에서는 비판을 위해 원인을 단순화시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들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김포 아파트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한 사례들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례 선별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11일 <뉴스센터12>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 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길리서치 조사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이 관련 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낙연 대표가 22.2%, 이재명 지사가 18.4%로 뒤를 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뒤를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이었고, 응답자 중 12.9%는 지지 인물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13일 <뉴스센터12>에서는 한국갤럽 조사결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동률을 이루며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19%로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한달 전 조사보다 8%포인트 오른 11%를 보이며, 해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를 얻어 그 뒤를 이었고 조사대상의 42%는 응답을 거절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메이커>에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도 한국갤럽과 비슷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나란히 20%를 넘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11.1%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정치인이 아닌 검찰총장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특기할만하지만, 이를 전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것과는 크게 다른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사

방식이 다른 점에 주목하면서, 윤 총장이 1위에 오른 한길리서치 조사의 경우, 여야 상위 3명씩 총 6명을 추린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야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빠지면서 윤 총장에 표 쏠림 현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는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착시 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50~60대여서 보수 성향이 강한 응답자의 의중이 많이 투여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의 경우 선택할 후보를 미리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 응답을 받았고, 50~60대 응답자 역시 과반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잠룡 총 11명을 선택할 후보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의 결과가 크게 달라서 시청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연합뉴스TV가 잘 짚어 원인을 분석해 주었는데요. 표본조사는 설명한대로 조사방식이나 조사 대상이 달라지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결과만 언급하지 말고, 조사방식이나 조사대상 등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면 앵커가 직접 언급해 시청자들이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방식에 대한 기본정보가 뉴스 화면으로 제공되기는 하지만, 결과 해석을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지율을 제시하며 누가 이기고 있는가만을 부각하는 경마식 보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12일 <뉴스워치>에서는 조두순의 연말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진 않았지만, 조두순과 접촉할 수 없는 안전한 도시로 이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영이 아버지는 아이도 불안감에 휩싸여 악몽에 시달리고 이웃 주민들에게 미안함도 커서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떠나야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싫어서 사실 발버둥을 쳤지만, 아이도 원치 않고 주변에 같이 산다는 걸 두려워 해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기자는 사건 발생 이후 나영이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으며, 나영이 치료를 위해 수시로 병원에 다니느라 아버지가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도 나영이 가족이 이사를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 2억원을 기부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를 보는 선례를 남긴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는데, 보도 과정에서 가명이지만 피해자의 이름이 반복되어 언급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론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다시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많이 샀던 사건인 만큼 피해자 명명은 자제하고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로 가해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시청자평가원(20. 11. 2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70회 -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학원가를 중심으로 발생한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능 대비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다가올 수능을 대비한 당국의 방역 준비 현황과 더불어 임용고시 학원가에 발생한 무더기 확진 판정 소식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뉴스리뷰>에서는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교와 학원 모두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입시학원에서는 학생들이 거리를 두면서 시험을 보고 학원 방역 관리대장에는 주말 학생들의 행적을 적은 자료가 빼곡하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긴급 수능 점검 회의를 여는 등 막바지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수능 당일 유증상자를 수용할 별도 시험 공간 마련을 완료했고,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수능 당일 응원전 자체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을 더 당긴 곳도 있는 등 모두가 수험생 안전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뉴스리뷰>에서는 서울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학원의 수강생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수강생과 직원 등이 잇따라 감염되며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구청은 수강생 등 200여 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권고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중등 임용고시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어서서 시험 과정에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응시한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 임용고시의 특성 상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토요와이드>에서는 노량진 학원발 집단 감염 여파 속에 중등 임용시험이 불안감 속에 치러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응시인원이 6만여 명인 중등교원 임용시험이 전국 11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고 전하면서 밤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67명은 시험을 보지 못했고, 밀접접촉자는 별도시험실을 마련해 일반 응시자와 분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험 직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증상 없는 잠복기 상태의 응시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학원발 전파 위험도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했지만, 방역 당국의 눈길이 미치지 못한 전파자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다가올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방역 대책을 소개하면서 학원가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 급증 소식뿐만 아니라 지난 주 중등교원 임용 고시에 적용된 정부의 방역 방침도 소개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볼 수험생이나 그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입시 대비 정부의 방역 지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의 수능 방역 대책보도는 시기적절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등 임용 고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 19 확진된 수험생들이 취해야 하는 혹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점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을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나 시험 당일 특정 지역에 다수 확진자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보도들이 포함되었다면 보다 유용한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정부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을 보도하면서 김해신공항 안 백지화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을 비중을 두고 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7일<뉴스리뷰>에서는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벌여온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증위원회는 안전, 환경, 소음, 시설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상세히 전하면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검증위는 특히 활주로·비행 안전과 관련해 검증위 의뢰로 법제처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다시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증위가 부산시와 협의가 선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면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추진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검증위는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이끌어낸 결론이라며 국민께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뉴스리뷰>에서는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여당은 절차 단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기 위해선 먼저, 국토부가 다음 달 확정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건설 계획이 포함돼야 하고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계획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신공항을 최대한 빨리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이고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해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2024년 착공에 들어가면 부산이 유치 추진 중인 2030년 엑스포 전 공항 문을 열 수 있고 4년 전 박근혜 정부 때 가덕도 신공항 입지 후보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은 김해신공항 추진을 정해 놓고 평가 기준을 바꿔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뉴스20>에서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여야 공방을 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알파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된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을 신속하게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며 야당을 향해 역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검증위가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홍문표 의원은 알파한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뉴스메이커>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만류에도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는데 신공항 위치를 가덕도로 명시한 특별법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항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지역구가 대구인 주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연일 표출되는 당내 불협화음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국무총리 산하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하고 부산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로 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을 중심으로 전하였습니다. 공항 건설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순한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만으로 논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한 보도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국가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합리적인 국가 자원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전체적으로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게 되면서 공항 건설로 생길 수 있는 지역적 이익과 국가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막연한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암시하는 보도에 치중하게 되면 구체적인 근거나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뉴스위치> [그래픽 뉴스] 코너에서는 광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2살 아이 사망, 어머니와 다른 형제 등 3명은 크게 다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고 발생 요인들을 분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지난 5월에도 7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지만 횡단보도와 방지턱만 설치했을 뿐,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나 단속 카메라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치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우선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천 5백 대, 신호등 2천 2백 개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모차를 끈 가족이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는 상황에서 맞은 편 차로의 운전자들이 차를 멈추거나 양보하지 않았고, 화물차 운전자는 40미터 앞에 있는 신호만 보고 그대로 주행해버려 참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범칙금과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 기준도 높였지만, 이번에 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어린이 1,500명이 넘게 다쳤고, 17명은 목숨을 잃었는데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진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일가족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 보도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나 혹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불행하게 닥친 불행이라는 프레임으로 적용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국가의 역할이나 법적 의무 사항 등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어떤 요소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단순하게 분노하게 하거나 슬퍼하도록 하는 보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익한 보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20년 11월 01일 04시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0년 11월 08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20년 11월 15일 04시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0년 11월 22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0년 11월 29일 04시 / 이정훈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